

#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6

##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6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9월 14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김유림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 [ 안내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http://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Vol.86

2

##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고용부,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소방청,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환경부·국토부,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사업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포함  
 서울특별시, 신숙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광역시, 「인천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입법예고

8

##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고시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기재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행안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행복청,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 발표  
 서울특별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 마련  
 부산광역시,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 수립 추진  
 대구광역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완료  
 경상남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

18

##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국토부,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설치·운영  
 국토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서울 서초구, 청주시 등 7개 지자체 최종 선정

국토부·서울특별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행안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 추진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행안부, 건설현장·산사태 위험지역 등 취약시설 2만4000여곳 안전점검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지원  
행안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교육부, 2026년까지 초·중·고 모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문체부,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국내 최초로 개관  
환경부, '도심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발표  
문화재청,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후보로 여수 거문도 선정  
문화재청, 집중호우에 따른 세계유산 '남한산성' 피해 긴급 복구 추진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서울특별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45년 만에 역사속으로  
서울특별시, 20년 방치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동북권 발전 명소로  
서울특별시, '강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운영  
부산광역시, 당감·개금생활권 부산시 첫 HAPPY챌린지 대상지로 선정  
부산광역시,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선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 설치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에 사계절 정원과 대나무 바람숲길 조성  
광주광역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세종특별자치시, '청자장 목욕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경기도,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추진  
강원도, 2022년 도시재생 사업추진 최우수 광역선정  
전라북도,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전라남도,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은유의 장소'로 설계

경상남도, 2023년도 섬발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경상남도, 2022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대폭 확대

고용부,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도보네비게이션 빅데이터 구축

서울특별시, '전세 적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서울특별시, '전·월세 시장지표' 시범공개

경기도, '경기버스정보앱'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충청남도,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경상남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 '에어경남' 오픈

#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8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 국토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8.4일부터 공포·시행 건축안전과. 2022.08.03.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全)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금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 (시행령·규칙 등)을 마련하여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주로 담았다.

\*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전도되면서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 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허가를 받아야하는 해체공사 대상확대 및 허가대상의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②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③ 허가권자의 점검권한 및 감리업무 감독 수단 강화, ④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 마련 등이다.

[ 「건축물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

구분	개정내용	
해체공사 허가	전문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적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체허가 대상 확대)</b> 공사장 주변에 위험요소* 존재시 건축물 규모 등은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 확대</li> <li>* 공사장 주변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위치,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li> <li>- <b>(해체계획서 작성기준)</b> 현행 제도는 누구나 계획서 작성이 가능하여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직접 작성(허가대상)하도록 자격 기준 신설</li> </ul>	
	구분	기존
	해체신고 대상	규정없음
	해체허가 대상	해체계획서 전문가 검토
	개정	해체계획서 전문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해체심의제 도입)</b> 해체허가 전 건축위원회를 통해 계획서·공법 선정 및 안전대책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해체심의제 도입(허가대상)</li> </ul>	

[ 건축물관리법 ] 주요 개정내용(계속) ]

구분

개정내용

해체공사  
감리

감리자 전문성 강화 및 수행업무 등록 의무화

- (감리교육 의무화)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매 3년)을 강화

- (사진 등 시공기록 의무화) 주요 공정 해체 작업 시\* 감리자가 반드시 사진·영상을 촬영하며, 수행한 감리업무를 시스템에 매일 등록

\* 건축물의 마감재 해체 전, 지붕 해체 전, 중간층 해체 전, 지하층 해체 전 등

해체공사  
시공

작업자 업무 신설 및 허가권자 현장 관리 권한 강화

- (해체작업자 의무 신설) 계획서대로 공사수행, 붕괴·추락 방지 대책 준수 등 안전한 공사를 위해 작업자(시공자)의 업무 및 처벌 기준 신설

- (허가권자 감독 강화)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개선·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 (변경허가 도입)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주요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가 변경계획 적정성을 검토

\* 변경허가(신고), 일괄신고로 구분되며, 변경허가(신고) 외의 사항은 공사완료시 일괄신고

< 변화된 해체제도 >

현행

해체  
계획서  
작성·검토

→

허가/신고  
(허가권자)

→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

→

착공신고  
(관리자)

→

해체  
공사

(허가)전문가 검토

개선

해체  
계획서  
작성·검토

→

해체심의  
(건축위원회)

→

해체/신고  
(허가권자)

→

감리자  
지정  
(허가권자)

→

착공신고  
(관리자)

→

해체  
공사

(허가) 전문가 작성 (허가) 의무  
(신고) 전문가 검토 (신고) 필요시

(허가) 의무 (허가) 현장점검 의무  
(신고) 필요시 (신고) 현장점검 필요시

처벌  
강화·신설

- 해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처벌 강화(과태료→처벌)

-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리자·작업자 경우 처벌 신설

구분	기존	개정
해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작업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국토부·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생활환경과. 2022.08.23.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sup>\*</sup>),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sup>\*\*</sup>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sup>\*</sup>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건)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층간소음 기준 강화계획 내용(현행→개정안) ]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 등가소음도(Leq)	43 → <b>39</b>	38 → <b>34</b>
	최고소음도(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 등가소음도(Leq)	45	40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 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 고용부,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직업건강증진팀. 2022.08.17.

건축  
정책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휴게시설 관련 내용 ]

구분	법령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li> <li>-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li> </ul> </li> </ul> </li> <li>•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2.08.18. 시행</li> <li>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3.08.18. 시행</li> </ul> </li> </ul>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크기 및 위치)</b> 최소면적은 6㎡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2.1m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을 최소면적으로 함</li> <li>-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li> </ul> </li> <li>• <b>(온도, 습도, 조명, 환경)</b> 온도는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li> <li>• <b>(비품 및 설비)</b>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li> </ul> </li> </ul>



## 소방청,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분석제도과, 2022.08.22.

건축  
정책

안전

소방청은 창고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수조 수원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 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첫째로, 대형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린다.

[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정(안) ]

설비구분	현행		재정(안)	증가량
옥내소화전설비	분당 130L x 20분	→	분당 130L x 40분	2배
스프링클러설비	분당 1,600L x 20분		분당 4,800L x 20분 (랙식창고* 60분)	3배 (9배)

\* 랙식창고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rack)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둘째로, 작업자들의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는 전 층에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창고시설 발화요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사항을 연구해왔다”며,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청사기획과. 2022.08.30.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일(화)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의 차질없는 개관을 위하여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국립박물관단지는 총사업비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5개 국립박물관 및 통합수장고 등이 집적되어 조성되는 대규모 문화시설로서, 2027년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올해 말 처음으로 준공되는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 시설(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 등)의 개관(2023년 하반기 예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운영법인 설립과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근거 법령\*\*을 제정하였다.

\* 1단계(~22): 통합지원시설(행복청) / 2단계(~24): 도시건축박물관(국토부) / 3단계(~25): 디자인박물관(문체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문화재청) / 4단계(~27): 국가기록박물관(국가기록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2.6.10. 제정·공포 완료, 9.11. 시행 예정」 / 「같은 법 시행령」: '22.8.30. 국무회의 의결, '22.9.11. 공포·시행 예정

### [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개요 ]

국립박물관 단지 건립 개요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S-1생활권 문화시설용지(문S-1)	
규모/기간	부지 75,402㎡, 연면적 80,647㎡ / 2016년 ~ 2027년	
총사업비	4,406억원(부지비 641억 · 건축비 3,451억 · 기타비 314억)	
주요시설	통합지원시설(어린이박물관·통합수장고·주차장 등), 개별박물관(4개)	

[ 국립박물관단지 조감도 ]

## 환경부·국토부, 수열에너지를 적용한 사업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포함 물산업협력과. 2022.08.30.

건축  
정책

환경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의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수열에너지는 하천수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이다. 수열에너지를 활용할 경우 기존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사례) 2021년 4월에 수열에너지가 시범적으로 적용된 한강홍수통제소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 30% 절감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85톤 정도가 감축되고 있음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도' 상의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내용을 포함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이다.

환경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평가 항목에 수열에너지가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계산 시 수열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효과도 인정받을 수 있어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관련 기술 적용을 주저했던 기관들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2022~2024)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시공 운영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관리과. 2022.08.19.



서울특별시가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등 5곳\* (총 195,860.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 신속통합기획 대상지(3곳): (재개발) 강동구 천호3-3구역  
(재건축)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 아파트
-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 확대 지역(2곳):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경우 8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공공재개발사업) 확대 지역은 8월 24일부터 2023년 4월 3일까지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0㎡를 초과하는 토지 등 아래 표와 같다.

[ 「부동산거래신고법령」 일부개정(22.2.28.)에 따른 허가기준 면적 변경 적용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

조남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인천광역시, 「인천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자치행정과. 2022.08.18.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군·구의 순서를 바로잡고, 군·구와 협력지원 체계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자치법」 등 대부분의 법률에서 지방행정체계를 ‘군’에 대한 규정 다음에 ‘자치구’에 관한 조문 내용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행정구역 명칭의 역사성 등을 고려해 군·구의 호칭 순서를 ‘군’을 우선으로 한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구에서의 주요정책 전파나 재난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 실·국·본부장을 ‘군구소통관’으로 지정해 군·구별 소통 책임성을 부여 한다.

이 규정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준호 인천광역시 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비정상적이고 관행으로 자리 잡았던 군·구 순서를 정상화하고, 군·구 상호간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원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건축  
정책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문화  
관광

### 국토부,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고시

공원정책과. 2022.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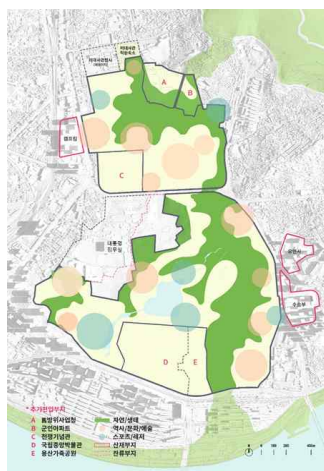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기본계획은 기존 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따른 기본구상 및 과제를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21.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지를 추가 반환받아 총 76.4만㎡(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되었으며 이에 대한 현황을 반영하였다.

부분 반환부지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정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정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용산공원 기본구상도 ]

## 국토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주택정책과. 2022.08.16.



국토교통부는 8월 16일에 향후 5년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방안에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았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전략은 ① 도심공급 확대,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③ 공급시차 단축, ④ 주거사다리 복원, ⑤ 주택품질 제고 등이며, '23년~'27년간 270만호 공급(서울 50만호,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대도시 52만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을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속 점검해나가고, 국민의 요청이나 현장 애로, 시장여건 등을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지속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전략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도심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li> <li>- 재건축부담금 :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li> <li>- 안전진단 :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li> <li>- 민간 도심복합사업 :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li> </ul>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택지 :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li> <li>- GTX :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li> <li>- 1기 신도시 :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li> <li>- 재해 대응 :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li> </ul>
공급시차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전면 도입</li> <li>- 신규택지(100만㎡이하):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통합</li> </ul>
주거사다리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총 50만호 공급, 연내 3천호 사전청약</li> <li>- 내집마련 리츠(임대료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모델): 12월 시범사업</li> </ul>
주택품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간소음: 바닥두께 강화시 분양가 가산 등 비용인정</li> <li>-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 노후임대 정비 본격화</li> </ul>
<p>◆ '23~'27년간 공급계획 ☞ 향후 5년간 270만호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50만호 : 최근 5년보다 50%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li> <li>■ 수도권 158만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호 공급</li> </ul>	

## 국토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 발표

주택건설공급과. 2022.08.18.

건축  
정책

주택  
정책

국토교통부가 고질적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중점과제는 ①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②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③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등으로 주요내용은 표와 같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500세대 이상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 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개발 등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다.

[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점과제 및 주요내용 ]

중점과제	주요 내용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li> <li>-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li> <li>-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li> </ul>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li> <li>-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li> <li>-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li> <li>-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li> </ul>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li> <li>-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li> </ul>



## 기재부, '유희·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 발표

국유재산정책과. 2022.08.08.

건축  
정책

국토  
정책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희·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에서도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유희·저활용 재산은 적극 매각·개발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유희·저활용 국유재산 중 민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은 매각을 통해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0조원 수준(행정목적 외 일반재산 41조원)

이에 정부는 유희·저활용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을 활성화하고, 즉시 매각이 곤란한 재산은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요내용
국유재산 매각 확대	향후 5년간 유희·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 α 규모 매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일반재산)</b>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 적극 매각</li> <li>- <b>(행정재산)</b>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 적극 발굴, 용도폐지·매각 추진</li> <li>*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 실시(9월~)</li> <li>- <b>(제도개선)</b>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병행</li> </ul>
국유재산 개발·활용	즉시 매각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희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유희부지 개발 후 민간참여 개발 또는 매각 추진</li> <li>- 국·공유 혼재지 개발 추진</li> <li>- 비도시 국유지 개발 추진</li> <li>- 도심 내 소규모 국유지 번들링 개발 추진</li> </ul>

## 행안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안전개선과. 2022.08.25.



행정안전부는 관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6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5년간(2022~2026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은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 중심 인식 정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추진전략	추진과제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안전 제도 정비·정착</li> <li>- 교차로·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인프라 확충</li> <li>- 이면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조성 활성화</li> <li>- 개인형이동수단(PM)·자전거·이륜차로부터 보행자 안전 확보</li> </ul>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보행자 보호 제도 정비 및 맞춤형 환경 개선</li> <li>-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보행환경 조성</li> <li>- 교통약자를 포용하는 보행환경 및 대중교통 정비</li> <li>- 지방도로 주변 마을주민 보행안전 강화</li> </ul>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 활성화를 위한 가로환경 및 보행공간 정비</li> <li>- 보행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신호체계·대중교통 등) 정비</li> <li>- 도시 내 걷기 좋은 길(산책로 등) 조성 확대</li> <li>- 보행 중심 도시환경 전환 기반 마련</li> </ul>
보행 중심 정책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li> <li>- 보행 정책 추진 관계기관·전문가 협업체계 구축</li> <li>- 지자체 보행 정책 및 사업 추진 역량 강화</li> <li>- 보행권 위상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정비 등</li> </ul>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및 보행자 중심 인식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 및 캠페인 추진</li> <li>-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신고 운영 강화</li> <li>- 보행 정책·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참여 확대</li> <li>- 미래 보행 관련 수요·여건 변화 선제적 대응</li> </ul>

## 행복청,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 발표

기획재정담당관. 2022.08.29.

### 건축 정책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기반을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①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②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③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을 결정하고, 2023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기반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 마련

주택정책과. 2022.08.16.



서울특별시는 '반지하'라는 열악한 주거 형태를 서울부터 순차적으로 없애고, 현재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반지하 거주민 지원대책'은 크게 1)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2)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통한 '주거약자와의 동행'이다.

먼저, 향후 20년간 도래할 258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23만호 이상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증가하면 서울시내 반지하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순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를 신설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책 진행 과정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약자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과거 지역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침수위험도와 침수방지설비 설치요건 등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장 지하반지하 주택을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 더 이상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침수흔적도(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9호, 제21조): 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

## 부산광역시,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 수립 추진

공공교통정책과. 2022.08.23.



부산광역시는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친화형 15분 도시 조성 ▲데이터 기반 안전·편리한 대중교통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혁신적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등 4대 전략, 11개 과제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대중교통 비전 2030’은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보와 자전거, 퍼스널모빌리티(PM), 대중교통,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해 시민들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상이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08년 이후 계속해서 40%대에 머물렀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30년까지 60%로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 대중교통 분담률 : '08년 41.1%, '19년 44.3%, '20년 40.4%, '21년 40.8%

[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 전략 및 주요내용 ]

전 략	주요 내용
대중교통 친화형 15분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망 확충을 통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구축</li> <li>- 교통거점시설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li> <li>- 개인형모빌리티(PM)와 연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li> <li>-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를 66.37km 확충하고 부산형 공유전기자전거를 도입</li> </ul>
데이터 기반의 안전·편리한 대중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이용자를 배려하는 교통환경</li> <li>- 이용자 수요를 빅데이터로 수집·분석해 시간·요일·계절별 수요맞춤형 버스 노선을 확대</li> <li>- 쾌적하고 안전한 승차환경을 조성</li> <li>- 수륙양용버스 운행</li> </ul>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수단·시설의 친환경성을 강화</li> <li>- 교통문화 선진도시를 시민과 함께 조성</li> <li>-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li> </ul>
혁신적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를 도입</li> <li>-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축</li> <li>- 모든 대중교통에 사용 가능한 '통합할인권'의 전국 최초 도입</li> <li>-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교통정책연구실 운영</li> </ul>

## 대구광역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완료

신공항건설과. 2022.08.18.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대구광역시는 8월 18일(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청사진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 공항은 대구광역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국방부, 공군 등과 함께 2020년 11월 착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광역시가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는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합의각서(안)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후, 8월 말경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중남부권 물류·여객 중심의 중추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함께 남은 절차들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본 조감도는 대구광역시에서 제작한 조감도이며, 향후 설계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공항 조감도 ]

## 경상남도, ‘2022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확정

환경정책과 . 2022.08.19.

도시  
정책

환경

안전

경상남도는 지난 7월 29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경상남도는 2020년 2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해 6월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22년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는 ‘대한민국 동남권 허브로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경남’이라는 비전 아래 유엔(UN)이 정한 17개 목표에 따른 34개 중점과제, 성과 지표 140개에 대한 2021년도 추진실적과 2022년도의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분야별 주요 목표지표는 ▲사회통합 분야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친환경 생태농업 전환 기반 구축, 권역별 공공의료체계 구축 ▲경제성장 분야에 탈탄소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선도산업 전환,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공동체 실현 ▲환경보전 분야에 수돗물 음용률 향상, 2050 경남 탄소중립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 자원순환사회 실현 ▲제도분야는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 등이다.

조용정 경상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과제를 민관이 협력해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 국토부, 지방 일자리·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 선정 지역정책과. 2022.0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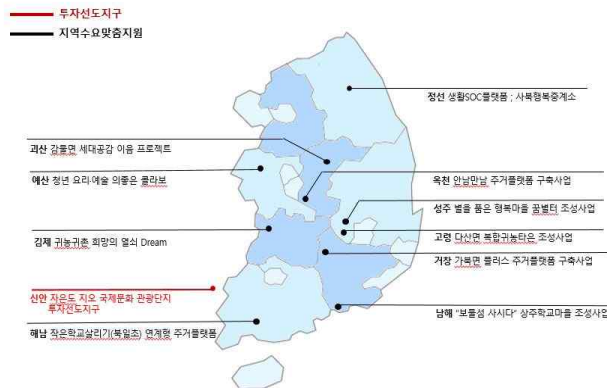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경제 활력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생활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투자선도지구\*와 2)지역수요맞춤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있다.

- \* (투자선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
- \*\* (지역수요맞춤지원) 지방 유입인구 수요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올해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 심사, 현장 점검 및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총 11개 신규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1개, 지역수요맞춤지원 10개)을 선정하였다. 투자선도지구는 전남신안군 “자은도 지오 관광단지 조성사업” 1곳이며,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거창군, 괴산군, 남해군, 옥천군, 해남군)”, “청년 창업과 연계한 생활거점 조성(예산군, 정선군·고령군)”,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귀농귀촌인 등의 정착 및 정주여건개선(김제시, 성주군)” 등 10곳이다.



[ `22년 지역개발사업 공모 선정결과 ]



## 국토부,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 설치·운영

기술정책과. 2022.08.23.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국토교통부 내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 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 및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기술안전정책국 내에 설치된다.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의 애로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관련 민간의 애로사항을 즉각적으로 청취하여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규제로 인해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성훈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하여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서울 서초구, 청주시 등 7개 지자체 최종 선정  
국토정보정책과. 2022.08.26.



국토교통부는 지난 6.24(금)부터 7.25(월)까지 약 한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공모결과, 서울 서초구, 청주시 등 7개 지자체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디지털트윈시범사업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험해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다.

[ 디지털트윈 2차 시범사업 선정 사업의 주요 내용 ]

선정 지자체	사업 및 분야	주요 내용
서울 서초구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교통영향평가 지원 모델 개발(행정인허가)	- 서초구 도로를 이동하는 시민의 모바일 통신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수요예측, 신호 최적화 등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교통행정 업무를 효율화하는 사업
충북 청주시	청주시 스마트 교통 분석시스템 구축사업(교통)	- 인구, 도시계획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버스노선 체계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합리적인 버스노선 결정을 지원하는 사업
충청남도	디지털트윈 기반 문화재보존 지원시스템 구축(행정인허가)	- 토지이용행위 관련 법령과 도 지정문화재의 주변 지역을 분석하여 문화재 개발 심의에서 적법성을 자동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디지털 트윈기반 탄소중립 활용모델 구축(환경)	- 온실가스 흡수 및 배출원에 따른 배출 감소량, 탄소 흡수량 등에 대한 목록을 구축하여 공장, 건물 단위의 도시 변화를 반영한 탄소현황지도를 제작하는 사업
강원 속초시	디지털 환경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관광도시 구현(도시 계획·관리)	- 산불 시뮬레이션 등 강원도 속초의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관리 행정활용모델을 개발하여 도시 문제 해결 및 예방업무에 활용하는 사업
강원 춘천시	효율적 내수면 관리를 위한 의암호 디지털 트윈 구축(환경)	- 의암호에 대한 정밀 수심자료를 구축하고, 토사 유입 및 퇴적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수심변화 예측, 수질 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는 사업
전남 영광군	디지털트윈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재난안전)	- 도심지와 저수지의 과거 홍수피해 이력, 수문 기상 관측자료, IOT계측 데이터,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홍수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실시간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사업

## 국토부·서울특별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 선정

주택정비과. 2022.08.26.

건축  
정책

도시  
정책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26일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으로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1.12.30.~'22.2.28. 접수)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노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함께 서울 도심 내 약 1만호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

위치	면적(㎡)	세대수(호수)	
		기존	예상
마포구 아현동 699 일대	105,609	2,246	3,115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대	102,366	658	2,322
종로구 연건동 305 일대	14,153	110	447
중랑구 면목동 527 일대	47,780	501	1,022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일대	38,518	573	915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30,079	492	775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11,428	196	287
금천구 시흥4동 4번지 일대	67,255	1,090	1,509

LH 한국토지주택공사·SH 서울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안)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설개선 추진

안전개선과. 2022.08.02.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18년~’20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분석·실시하여 총 350건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행환경 요인으로는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하였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되었다.



[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요인 분석 ]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총 350건 중 단기(240건) · 중장기(110건)별 조치기한을 구분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행안부, '교통사고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40개소 관계기관 합동점검

안전개선과. 2022.08.08.

건축  
정책

안전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759개소로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개소(전체 보호구역의 0.24%)이다.

이번 점검 대상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사고 건수는 총 85건(16.3%, '21년 보호구역 전체 교통사고 532건 기준)으로, 사망자 2명 및 중상자 17명 등 사상자 총 86명(15.2%, '21년 보호구역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565명 기준)이 발생하였다.

전체 보호구역과 사고 다발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①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 ② 방과 후 시간대, ③ 취학 전과 저학년에서 주로 발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후석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전체 보호구역의 1% 미만에 불과한 40개소에서 16.3%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체계 전환의 시작점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안부, 건설현장·산사태 위험지역 등 취약시설 2만4000여곳 안전점검

안전기획과. 2022.08.11.

건축  
정책

안전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상기후 및 사회 변화 등에 따른 재난 발생의 위험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사항에 발맞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재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 캠페인 등 안전실천 활동을 국민과 함께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캠페인과 함께 가정, 어린이집 등 생활 주변 시설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자율안전 점검운동도 실시한다.

11월에 추진 예정인 안전한국훈련은 기존의 보여주기식 훈련에서 벗어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안전 문화를 널리 향유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안전문화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보다 더 안전한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을 위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안전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지원

재정정책과. 2022.08.12.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더하여, 호우 현장 조기수습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행정응원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 인구감소 위기 극복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첫 배분

지역균형발전과. 2022.08.16.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함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다.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 인구감소지역 : 210억원 / 168억원 / 140억원 / 126억원 / 112억원

관심지역 : 53억원 / 42억원 / 35억원 / 32억원 / 28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6년까지 초·중·고 모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교육시설안전팀. 2022.08.04.

건축  
정책

안전

교육부는 2026년까지 설치기준에 관계없이, 초·중등학교의 모든 기숙사,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한다.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과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특히,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피가 취약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기숙사의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시설규모를 고려하여 설치되므로 초·중등학교 기숙사 건물의 21% 정도에만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기준 층수나 면적이 미달되는 기숙사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부터 5년 간(2022~2026, 총 3,199억 원) 총 1,278동(947개교)의 기숙사를 대상으로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교육청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설치율이 낮은 곳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체부, 장애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국내 최초로 개관 장애인체육과. 2022.08.18.

건축  
정책

문화  
관광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8일(목), 장애인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가 국내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광주북구 반다비체육센터’는 2021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해 1년 4개월여 만에 문을 여는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서 건립에는 총 143억 원(국비 6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면적은 4,621㎡이다. 지상 1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입수 보조 경사로가 설치된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편의시설을, 지상 2층에는 보치아·배드민턴 등 장애인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관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지하 1층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 면수가 20% 이상 확보된 주차장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현재 건립 지원을 확정된 반다비체육센터 77개소를 포함, ‘27년까지 전국에 총 150개소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남(양산)과 전북(부안, 익산) 등지에서 차례로 문을 연다.

아울러 2023년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를 9월 8일(목)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실사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건립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주북구 반다비체육센터’가 광주 지역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자리 잡아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처음 문을 연 ‘반다비체육센터’가 향후 체육시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표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실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발표

수자원정책과. 2022.08.30.

국토  
정책

도시  
정책

안전

환경부는 지난 8월 초 수도권 등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침수 및 하천홍수방지대책'을 마련해 8월 23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번 방지대책에 따라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전까지 도림천 유역(신림동)에 디지털트윈과 연계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구축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AI홍수예보 구축전이라도 전국 단위로 기존 위험지도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로 설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침수 및 하천범람을 방지하는 기반시설(인프라)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3곳의 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현재 연 1,000억 원 수준의 하수도 개량 예산을 2023년에는 49% 증액하고, 연 3,500억 원 수준의 국가하천 정비 예산은 2023년에 43% 증액 편성하여 지방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을 출범시키고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문화재청,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후보로 여수 거문도 선정

근대문화재과. 2022.08.09.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문화재청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내항 일원(이하 ‘여수 거문도’)을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공모에는 2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현지조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근대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이 우수하여 사업의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여수 거문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여수 거문도는 ▲거문도사건 등 근대문물 유입과 관련된 문화유산 보존, ▲내항을 중심으로 한 근대 가옥거리, ▲해방이후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삼산면 의사당 건물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어촌마을의 근대생활사를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다.

문화재청은 여수 거문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 등을 거쳐 근대역사문화공간인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여수시와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과거와 현재, 문화재와 지역이 공존하는 특화된 명소로 재탄생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여수거문도 내항 ]

## 문화재청, 집중호우에 따른 세계유산 ‘남한산성’ 피해 긴급 복구 추진

안전기준과. 2022.08.12.

건축  
정책

문화  
관광

문화재청은 지난 8월 8일부터 내린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사적 남한산성의 성벽 일부가 무너져 현장조사 후 긴급 복구할 예정이다.

지난 8일 경기도 광주지역에 내린 시간당 최대 105mm의 집중호우로 남한산성 좌익문(동문) 내측 구간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장경사 송암정터 구간으로 토사가 유입되어 길이 15m, 높이 5m 규모의 성벽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탐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근처에 출입통제 울타리를 세워 접근을 차단한 상태이며, 또 다른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남한산성 전체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와 협력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성벽구간에 대해서는 국비 5억 원 내외의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조속히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남한산성 출입통제(서문) ]

## 조달청,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완료

조달청. 2022.08.1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조달청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해방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잔재 청산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는 우리 국토 곳곳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조달청은 이러한 흔적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말 기준 1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대한 민국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라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 노력을 지속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연도별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완료 실적('22.7월말 기준) ]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7	합계
필지	189	905	908	464	598	441	393	1,482	1,005	310	6,695
면적	219	721	380	293	561	172	422	1,378	954	100	5,200
금액	9,635	25,711	25,000	7,191	13,076	6,500	15,132	25,399	16,826	8,679	153,149



## 서울특별시,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45년 만에 역사속으로

공공개발기획단. 2022.08.18.

건축  
정책

주택  
정책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가 지난 16일(화) 완료됐다. 개발시대의 시대적 소명을 활발히 수행했지만 성수동 일대의 변화와 발전으로 오랜 숙원사업이 된 공장 철거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1977년 공장 가동이 시작된 지 45년 만이다.

서울특별시는 공장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이하 ‘사전협상’)을 통해 28,804㎡에 달하는 부지를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적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인 (주)삼표산업과 연내 사전협상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4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공장 철거 부지를 서울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이 찾아오는 대표 명소이자, 서울숲과 연계한 청년문화 복합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1종 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 규모는 약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숲 고도화 ▲청년 문화거점 조성 ▲광역적 교통체계 개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 확충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전후 ]

## 서울특별시, 20년 방치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동북권 발전 명소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2022.08.22.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문화  
관광

과거 서울 동부 물류의 핵심거점이었지만 20년 가까이 나대지로 방치된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 부지가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약 5만㎡ 규모로, 축구장 7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물류시설은 100% 지하화해 소음·분진 등 주민 우려를 최소화한다. 지상부에는 최고 39층 규모로 아파트·오피스텔, 업무시설, 쇼핑센터 등 판매시설,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공공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채워진다. 중랑천과 가까운 부지 동측에는 중랑천 수변의 풍경을 바꿀 세련된 건축디자인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선다.

특히, 지하에 조성될 물류시설은 택배 등 증가하는 도시 물류에 대응하면서도, 교통혼잡·소음 같이 물류시설에 따른 부영향은 최대한 줄인다. 마이크로필먼트센터(MFC) 등 소규모·생활 물류 중심으로 운영하고, 물류차량도 소형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한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분리된 물류차량 전용 도로도 개설한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① 대도시 서울의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류시설은 지하화해 신개념 시설로 재정비하고, ② 지상부에는 동북권의 경쟁력을 견인할 복합건축물을 조성한다. ③ 사전협상으로 확보되는 공공기여를 활용해 중랑천에 수변 감성공간을 조성하여 동북권의 명소로 만든다.

홍선기 서울특별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기대감으로 변화시키고 동북권역 대표 명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 운영

주택정책과. 2022.08.26.



서울특별시는 전세 계약을 하는 시민들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3대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 '깡통전세' 위험 예방 3대 서비스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한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통한 걱정 전세가격 검증이다.

첫째,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주의사항,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2133-1200~1208로 전화하면 된다.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최근에는 시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깡통전세'가 특히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경우 주변시세 확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기 등에 대해 집중 안내하고 있다.

둘째,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housing.seoul.go.kr)'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세가격 걱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 부산광역시, 당감·개금생활권 부산시 첫 HAPPY챌린지 대상지로 선정

15분도시기획단. 2022.08.15.

건축  
정책

도시  
정책

부산광역시는 ‘15분 도시 부산’을 조성·확대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인 ‘Happy챌린지’ 대상지로 부산진구 당감·개금생활권(부암3동, 당감1·2·4동, 개금3동)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15분 도시의 확산과 자치구·군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Happy챌린지’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도구 신선남향권, 수영구 망미수영권 2곳을 추가 선정했다고도 전했다.

‘Happy챌린지’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제1호 공약인 ‘15분 도시 부산’을 조성·확대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다. 올해부터 ‘24년까지 부산광역시 전역에 있는 62개 생활권 가운데 5개 대표생활권을 선정, 생활권 당 300억 원을 투입하며, 보행 기반의 생활편의시설 등 교류 및 공유 공간을 확충하고 조성된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5분 도시 확산모델을 조성한다.

선정위원회는 15분 도시의 다양한 전략과제를 확산하고 자치구·군의 참여와 관심을 위해 선정 대상지 외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영도구 신선·남향생활권과 수영구 망미·수영생활권 2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제안했고, 시는 선정위원회 권고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향후 수립할 예비계획에 시범사업 내용과 대상지를 포함할 계획이다.

김광희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Happy챌린지’ 사업은 시에서 직접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자치구·군 등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민간의 참여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Happy챌린지 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공사례들이 시 전역으로 확산되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도시 부산이 구현될 때까지 시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 부산광역시, 소규모 공공건축물 개선사업 추진

총괄건축과. 2022.08.29.

건축  
정책

주택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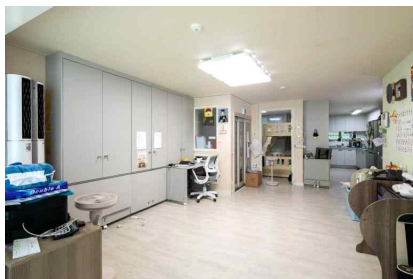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가 소규모 노후 공공시설 건축환경 개선사업인 ‘호프 위드 (HOPE with) 허그(HUG) 프로젝트’의 사업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HOPE : House of people's empowerment의 약자로 ‘서민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는 집’이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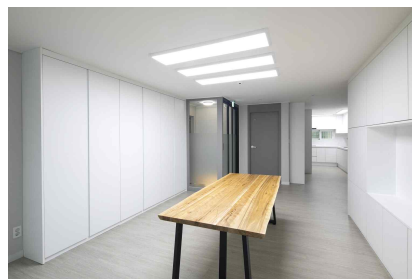
특히, 이는 ▲지역 건축가들의 설계 재능기부와 ▲기업 등의 재원 후원 ▲지역단체 및 개인의 자원봉사가 어우러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민간주도형 도시거주환경 개선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100㎡ 내외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이다. 대상지별 5천만 원 내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신청은 부산건축제 사무국 누리집 (<http://www.biacf.or.kr>)에서 할 수 있다.

김필한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가들이 설계 재능기부자로 참여하는 만큼, 다른 집수리 사업보다 전문성이 확보되는 사업”이라며 “특히,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의 좋은 모델로 평가를 받는 만큼, 적재적소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후원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시공 전



시공 후

[ 호프 위드(HOPE with) 허그(HUG) 프로젝트 시공 사진 ]

## 인천광역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 설치

교통정책과. 2022.08.16.

도시  
정책

안전

인천광역시가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슬로우존을 설치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4일 중구 신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완료 한데 이어, 오는 11월까지 인천광역시내 초등학교 57개교 출입문 주변에 노란색 슬로우존(Slow Zone)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구 신광초등학교 인근은 대형차의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로 인해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신광초 어린이 보호구역을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설치했다.

김을수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장은 “우리는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속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광역시 노란색 횡단보도 ]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에 사계절 정원과 대나무 바람숲길 조성

월미공원사업소. 2022.08.12.

도시  
정책

환경

인천광역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월미공원에 사계절 정원과 대나무 바람숲길 조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1,280㎡규모의 사계절 정원에는 에메랄드그린, 스카이로켓향나무, 선주목, 남천, 산수국 등 교목 51주, 관목 1,600주, 초화류 9,450본 등 다채로운 수종을 식재하고, 정원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며 쉴 수 있도록 산책로 포장, 흔들의자, 플랜터를 설치했다.

또한, 공원 방문 시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청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무장애나눔길 인근 100m 구간에 대나무 바람숲길을 조성했다.

최종순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은 “푸르게 자란 대나무에서 즐기는 죽림욕은 일반적인 산림욕보다 공기정화나 살균력이 뛰어나고 대나무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은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완화효과가 크다”며, “겨울철 낙엽으로 인해 삭막하게 보이는 월미산에 사시사철 푸르른 대나무 식재를 통해 월미산 경관을 향상시키고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 지역 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월미공원 대나무 바람숲길 현황사진(조성 후) ]

## 광주광역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건강정책과. 2022.08.23.



광주광역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LH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자립생활주택운영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은 자립이나 독립생활 욕구는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주택과 주거유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전국 지자체 중 서울, 경기도에 이어 광주가 3번째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5월에는 LH전남지역본부와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및 매입임대주택 2호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립생활주택 운영지침’과 ‘입주자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자립생활주택 거주형태는 주택 1호당 2명이 사용하며 1인 1실이다. 입주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65세 미만 자립 희망 정신질환자 중 일정한 도움을 통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로, 최근 정신질환자 주거복지지원협의체 심사를 통해 2명이 입주 확정된 상태다. 최대 3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매입임대주택 및 임대보증금 지원 ▲주택 내 가전·가구·비품 구입 및 설치 ▲입주 전 하자보수 점검·보험가입·청소 등 준비 ▲입주자 주거유지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청자장 목욕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지역균형발전과. 2022.08.25.

건축  
정책

문화  
관광

1985년 지어져 30년 넘게 방문객들의 쉼터로, 주민들의 목욕탕으로 자리를 지켜왔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의 ‘청자장 목욕탕’이 주민·청년·예술가들의 문화놀이터로 재탄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청자장 목욕탕이 새단장을 마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26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은 총사업비 65억 6,0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2020년 12월 구조보강(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준공 후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운영 물품 등을 준비해왔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은 1,443㎡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527㎡ 규모로, ▲1층 북카페 ▲2층 창작공작소 ▲3층 창작스튜디오·게스트하우스 ▲4층 공동휴게공간과 옥상정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은 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주)로컬스티치’에서 운영을 맡았으며, 개관을 기념해 1층에서 “모두가 크리에이터(We Are All Creator)”를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최민호 시장은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을 청년·예술가 등의 작업공간이자 놀이터와 같은 문화시설로 만들어 소통과 교류의 문화장소로 자리매김하겠다”라며 “또 다른 문화재생시설인 조치원 1927, 문화정원과도 연계해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자장 외부전경 ]

## 경기도,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추진

하천과. 2022.08.19.



경기도가 올해부터 환경부, 도내 시군과 협력해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을 추진, 하천과 문화공간, 지역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치수, 이수, 수질, 생태 등 다양한 사업을 일원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 하천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사업 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 최종 3개 사업을 선정하여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민들이 하천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지역 관광·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수요에 적극 부응해 하천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패키지형 사업을 구상, 지역민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창의적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성장 동력이 될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하천수변공원 조성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 강원도, 2022년 도시재생 사업추진 최우수 광역선정

도시재생과. 2022.08.01.



강원도는 지난해까지 선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집행율, 사업추진 실적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광역선정) 국비 배정총액 360억 원을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 국비 집행률 제고 등 인센티브 확보에 주력하여 기본배정 120억 원, 쇠퇴도·신규수요고려 120억 원, 평가최우수 인센티브 120억 원을 합산한 국비 360억 원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는 도시재생정책 변화에 따라 7개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을 4개 유형으로 통합하고 선정규모를 연간 전국 100여곳에서 44여 곳으로 대폭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의 내실화를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금년도 도시재생사업 광역선정 공모 시 특화재생형, 우리동네살리기 유형별 적정 배분을 통하여 4개소의 신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손창환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국가정책 변화(경제 재생, 지역 특화재생)에 능동적 대응으로 쇠퇴된 도심의 특화재생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협업할 예정이며,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달하는 만큼 주거환경개선, 일자리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등 더 나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전라북도,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대도약청년과. 2022.08.17.



전라북도는 청년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하반기 공모를 9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특색에 맞는 청년마을을 발굴해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업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1.2억 원, 시군비 0.8억 원 등 총 사업비 2억 원이 투입되며, 1개소당 4천만 원씩 지원된다.

모집 대상은 대표가 청년이고, 청년 비율이 40% 이상으로 전라북도에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단체 또는 기업 등은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을 받은 시·군은 9월 8일까지 전라북도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청년활동가, 마을만들기 관계자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평가, 2차 현지실사 및 발표평가를 거친다.

전라북도는 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의 실효성, 지역주민 참여, 지역활력 도모 등을 평가\*해 예비 청년마을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기준 : ① 사업 실효성 ② 사업 지속성 ③ 시군 추진의지 ④ 지역자원 연계성 ⑤ 지역주민 유대, 참여 ⑥ 사업추진의지, 비전 ⑦ 지역활력도모

강승구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이 주체가 되고, 지역주민과 상생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 전라남도,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은유의 장소’로 설계

문화자원과. 2022.08.30.

건축  
정책

문화  
관광

전라남도가 도민 염원을 담아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한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에서 독일 주현제 바우쿤스트(Hyunjejo\_Baukunst) 건축사무소의 ‘은유의 장소’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은유의 장소’는 명료하고 강력하게 대지와 건물과의 관계를 표현한 설계안으로 평가받았다. 자연친화적으로 부지를 최소한으로 개발하려는 의지가 돋보였고 영산강변으로 펼쳐지는 경관 데크와 공간의 짜임새가 좋다.

2단계로 진행된 이번 설계공모는 지난 6월 9일 1단계 공모에서 접수한 31개 작품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및 배치계획 등을 심사해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어 29일 전라남도청에서 진행한 2단계 심사에서 작품별 발표와 심사위원 토론 및 투표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했다.

‘은유의 장소’ 외에 2위는 네덜란드 씨아이이 건축사무소(de Architekten Cie)의 ‘시간 사이를 걷다(Walking Between Times)’를, 공동 3위는 국내 (주)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와 카타콤 건축사사무소(Catacombe Architects), 캐나다의 오유 건축사무소(Office Ou Ltd)가 각각 제출한 작품을 선정했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사업비 422억 원(국비 169억 원)을 들여 연면적 8천300㎡ 규모로 건립된다. 2023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 의병의 날(6월 1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당선작 (은유의 장소)]

## 경상남도, 2023년도 섬발전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어촌발전과. 2022.08.08.



경상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섬 발전 사업의 2023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섬지역 특성화사업 4개소(총 사업비 26억 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11개소(총 사업비 68억 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섬지역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한 섬 주민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통영시 추도(5억원) ▲통영시 비진도(5억원) ▲거제시 지심도(5억원) ▲거제시 황덕도(11.25억원)가 선정되었다.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은 ▲창원시 1개소(송도, 10억원) ▲통영시 6개소(좌도, 우도, 옥지도 입도 등, 29억원) ▲사천시 1개소(마도, 3억원) ▲거제시 3개소(지심도, 이수도, 가조도, 25억원)가 선정되었다.

그 중 통영시에서 신청한 ‘드론을 활용한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통영시 32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드론 물류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2개 마을에 마을별 드론 공동 방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섬 지역의 접근성 한계를 극복하고 정주 편의성을 개선하여 섬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김제홍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섬발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 2022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대폭 확대

건축주택과. 2022.08.22.



경상남도는 2022년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당초 3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해당 사업은 조명·방범시설 설치 등을 통한 불량주거지의 범죄 및 재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셉테드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매년 3~4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11개 시군, 29개 사업(총사업비 26억 4,900만원)을 추진하였다. 사업 추진을 통하여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미관개선·지역 관광지 확보 등 각종 홍보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어 주민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 2월 사업이 선정된 김해시(고모마을)·의령군(중동마을)·고성군(고성시장) 등 3개소에 대해 디자인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다.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노후주택이 밀집된 좁은 골목길, 인근 유흥시설과 재래시장에 인접한 우범지 등의 범죄발생률이 감소하고, 쾌적하고 주민이 행복한 환경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범죄예방 관련 주민요구사항 조사결과 ‘방범시설 확충(47%)’이 ‘처벌강화(40%)’보다 높아 주민들은 사전에 범죄발생요소 제거 및 개선을 더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가 대상 사업지는 ▲통영시 통영여중·고 등하굣길 ▲김해시 진례면 고모마을 사업 연장 ▲양산시 백동초등학교 등하굣길 ▲하동군 진교버스터미널 일원 ▲함양군 함양초등·함양여중·위성초등학교 일원 ▲거창군 아림고등학교·거창도립대학 일원 등 6개 시군 7개소이며, 올해 기존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고용부,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도보네비게이션 빅데이터 구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2.08.01.

건축  
정책

도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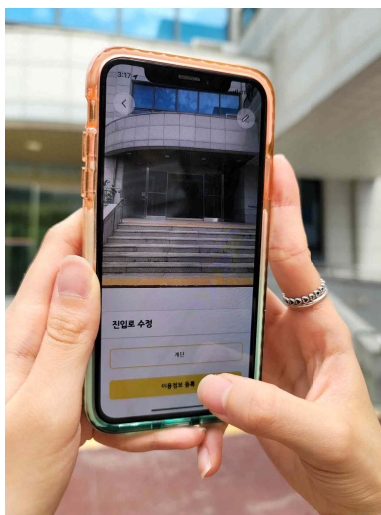
안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월 1일(월)부터 3개월간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해 전국 50여개 기관과 함께 교통약자 장애인을 위한 도보네비게이션 빅데이터 구축 사회공헌활동인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

\*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各各)의 눈(視)을 모아 장애인의 눈(視)이 되어준다’는 뜻으로, 시각·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이다.

본 프로젝트는 현 도보네비게이션이 건물을 점으로 인식하여 시각장애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목적지에 도착해도 입구를 찾지 못하거나, 계단 등 장애물로 인해 출입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공단 김현종 소통협력실장은 “시시각각(視視各各) 프로젝트는 사진 한 장으로 이동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참여해주신 전국의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시시각각 프로젝트 ]

## 서울특별시, '전세 걱정가격 상담서비스' 개시

토지관리과. 2022.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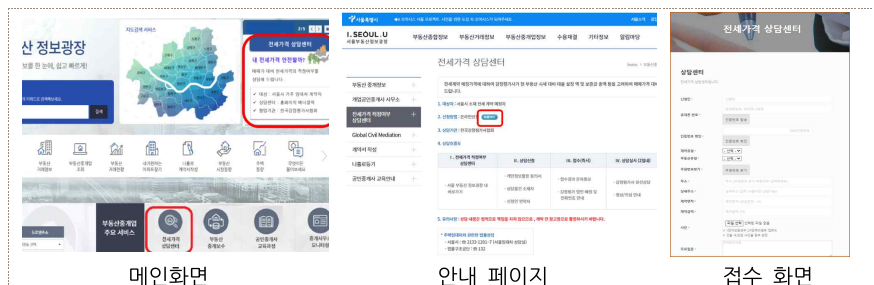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 전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 소재지, 주택사진 등 주택정보 입력 및 상담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는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해 준다.

박희영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장은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주택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주택문제의 경우 피해 금액이 커 예방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전세가격 상담센터' 서비스화면 ]

## '서울특별시, '전·월세 시장지표' 시범공개

주택정책지원센터. 2022.08.23.



서울특별시는 2022년 2/4분기 서울 시내 지역·면적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전·월세 시장지표'를 서울주거포털(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8.23(화)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분기마다 지표를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기존에 여러 기관에서 전·월세 시장관련 지표를 제공해 왔지만 정보가 필요한 사람이 데이터를 직접 추출, 분석해야 해 주택 거래나 계약 등에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가 내놓은 분석 자료는 서울 시내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신고 자료를 토대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석하여 수치, 도표 등 시각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서울특별시는 이번 지표 발표를 위해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페이지를 개발, 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월세 임차물량 예측정보(법정동·면적·주택유형·건축연한별)와 함께 25개 자치구의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을 공개한다.

유창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전·월세 시장에서 정보 측면 약자였던 임차인이 '전·월세 정보몽땅'에 투명하게 공개된 시장 지표를 활용,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불안해하거나 불리한 계약에 놓이는 일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택 거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월세 수요자가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시장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월세 정보몽땅 배너 ]



## 경기도, ‘경기버스정보앱’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교통정보과. 2022.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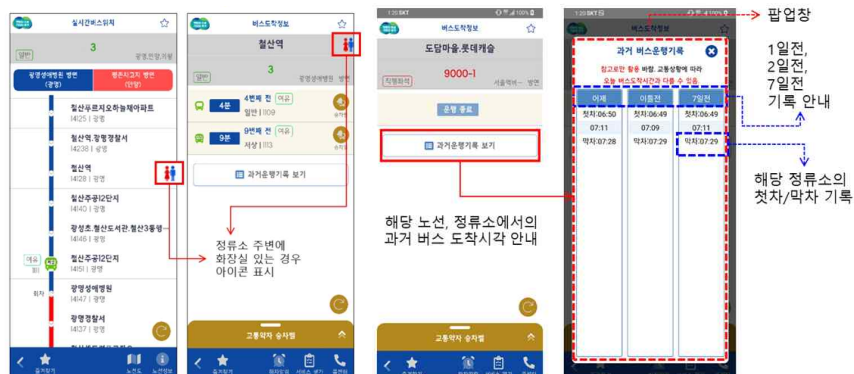
도시  
정책

경기도는 도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버스정보앱’을 통해 ‘버스 정류소 주변 개방화장실 유무’, ‘과거 버스 도착시각’ 등 새로운 정보제공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버스 정류소 주변 개방화장실 유무’ 정보제공은 용무가 급한 승객이 정류소 인근에 개방화장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경기도는 우선 일 운행회수 3회 이하인 버스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앱에서 이용하려는 노선과 정류소를 선택한 뒤 ‘과거운행기록 보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을 통해 과거 버스도착 시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향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차 발전시키며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버스정보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류소 주변 개방화장실 유무 및 과거 버스도착시간 정보제공 ]

## 충청남도,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건축도시과. 2022.08.23.

국토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정책

충청남도는 경관·건축·교통심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통합심의회는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했던 사항을 한 번에 접수 및 처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 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본심의 시 재심의 건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는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본심의 서류보다 대폭 간소화했다.

충청남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 간 상충의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돼 민원인으로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 '에어경남' 오픈

보건환경연구원. 2022.08.01.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남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비롯한 각종 대기질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대기환경정보서비스 누리집 '에어경남'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누리집 '에어경남'(air.gyeongnam.go.kr)은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환경 변화를 적용한 반응형 웹사이트로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PC버전과 동일한 기능과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경남지역 실시간 대기질 현황 및 측정소 위치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기반으로 배치하였고, 경남 대기질 평균값과 시군별 측정값을 메인화면에 표시하여 간결하고 직관적인 구성의 디자인을 통해 정보 전달력과 시각성을 높였다.

특히 관심 있는 지역 측정소를 누리집이나 모바일에서 클릭 또는 터치하면 미세먼지 등 6개 항목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24시간 대기질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우리동네 대기질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에어경남'을 통해 노인, 유아 등 정보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정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해 대기환경 악화 시 신속한 피해 예방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ISSN 2635-5140